



2025. 5.

국회미래연구원 | Futures Brief | 제25-1호

#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여영준 부연구위원, 유희수 연구위원, 김은아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Futures Brief | 제25-1호

ISSN

2799-3531

발행일

2025년 5월 22일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Fax 02-786-3977

# Contents

요약 | 01

1. 서론 | 05

2. 산업지원 정부조직 | 12

3. 정보통신분야 정부조직 | 26

4. 기후위기 대응 정부조직 | 37

5. 제언: 산업정책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 48

# 요약

## 1. 서론

- ▶ 산업정책은 기술개발, 산업지원, 공급망 재편,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관건
- ▶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국제 경제통상 질서의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 기술패권 경쟁, 복합 위기(기후위기 등)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로 접근해야 함
- ▶ 그간 우리나라 산업정책 관련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적 기조나 상징성에 치우쳐 추진된 측면이 있으며, 정책기능 간 연계성과 복합수요 대응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2. 산업지원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

- ▶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전략적 연계를 전제로 한, 통합형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이 핵심 정책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음
- ▶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부-중기부로 기업 규모에 따라 주무 부처가 분리되어 있어 산업지원정책이 단절되는 한편, 기능 중복과 역할 충돌이 지속됨
- ▶ 이로 인해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부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성장기업의 전략적 육성 기회 상실, 한계기업의 구조적 존속, 산업생태계의 역동성 약화 및 혁신 저해로 이어지고 있음
- ▶ 따라서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합해, 산업생태계 중심 기능연계를 이뤄내고 산업정책-기업정책의 통합적 설계·실행체계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

- 산업부를 모체로 하여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요 정책영역별로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중기부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산업부와 통합하되,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 ‘청’ 단위로 분리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이러한 조직개편은 산업혁신 파급력 강화, 정책 연계성 제고, 자원배분 전략성 확보 등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해야 함

### 3. 정보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

- AI와 기존 산업, 특히 제조업과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IT와 관련 산업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구축이 요구됨
-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조직과 소관 업무를 산업부와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AI이고, 향후 AI는 온디바이스 형태로 전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제조업의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융합·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이 산업부의 산업정책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산업부와 중기부 통합에 이어 정보통신 분야 조직과 업무까지 산업부로 통합할 경우 거대부처 출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뒤에서 언급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산업부로부터 에너지 부문을 분리하고, 통상 부문 역시 총리실 등으로 이관할 경우 그와 같은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또 다른 대안으로 “IT 및 지식정보 분야 정책을 전담할 정부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위에서 제안한 산업부 통합안이 비록 에너지, 통상 부문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비대해질 수 있고, 그 결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만약 산업부와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앞서 살펴본 현행 정부조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단일 정부부처로 통합 재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산업과의 연계 등 변화를 고려하여 지능정보 기술과 관련 산업 진흥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4. 기후위기 대응 정부조직 개편방안

- ▶ 한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에너지와 산업 구조의 한계로 인하여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대전환이 요구됨
- ▶ 현 기후변화 정책은 부처 간 분산과 분절로 실효성이 낮고, 조정기구의 역할도 불투명한 가운데 부처 개편 없이 제한적 조치만 반복되어 있음
  -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이 에너지·산업 부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대응 주무부처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고, 환경부 영향력의 한계로 주무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 또한, 산업부와 환경부 간의 정책 칸막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부재로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이 어려운 구조임
- ▶ 현행 거버넌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처 개편안이 제시되었으나, 기존 부처 중심의 개편이나 위원회 기능 강화로는 충분한 개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환경부 또는 산업부 중심의 기후 전담부처 신설은 기존 부처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구조적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탄녹위가 행정위원회로 격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움
- ▶ 에너지-기후 통합 부처(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탄소 다배출 부문과 기후 주무부처 간의 정책 분절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정책 기획 및 이행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탄녹위의 합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이행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의 보완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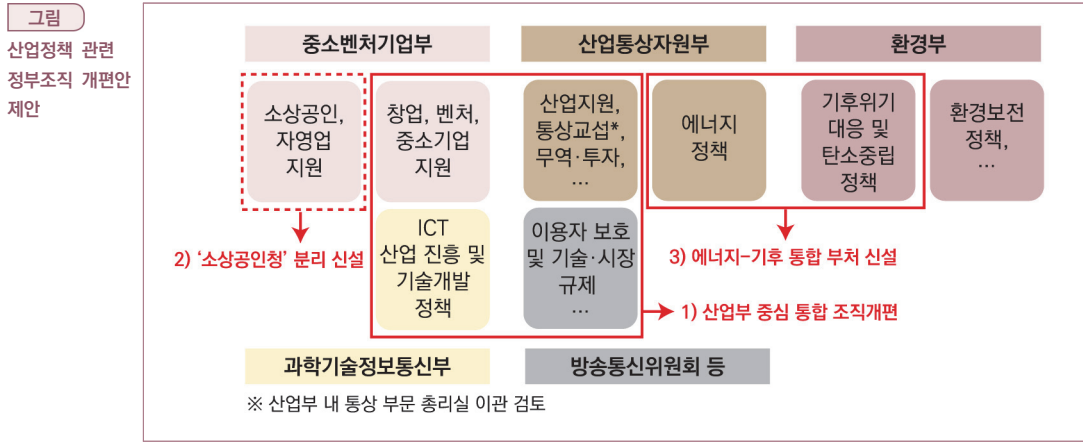
#### 5. 제언: 산업정책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 ▶ [산업부 중심 통합 개편] 산업-기업-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
  - ‘산업부-중기부 통합 개편’을 통한 산업-기업지원정책 간 연계성 강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은 별도 ‘청’ 단위로 독립시켜 전문성·실행력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산업부 중심 ‘정보통신-산업정책기능 통합’을 통한 기술-산업 전략 융합  
(보완적 대안: AI 및 기술-콘텐츠 융합 중심 IT분야 단일 정부조직 신설)

▶ **[에너지-기후 통합부처 신설] 탄소중립 이행력 제고를 위한 부처 신설**

- ‘기후(환경부)-에너지(산업부) 정책기능 통합’을 통한 정책 실행력 강화
- 기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위원회 기능의 보완 및 정비



# 01 서론

## 1. 문제의식

- ▶ **정부조직은 단순한 행정서비스 전달기제를 넘어, 국가의 정책목표를 제도적으로 구조화하고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역할함**
  -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국제 경제통상 질서의 변화, 기술패러다임 전환, 기술패권경쟁 격화, 복합 위기의 상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은 정책기획-집행 간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야 함
  - 정부조직개편은 더 이상 정권 교체기 상징적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책기능의 재배열, 조직 간 연계구조 강화, 행정기구 간 조정역량 확보 등 시스템 차원의 재설계로 접근해야 함
  - 산업·기술·기후·ICT 등 정책영역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통합적 대응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조직은 다기능·다층적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 ▶ **그간 산업정책 분야 정부조직개편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책 수요의 복잡성에 대한 제도적 적응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철학을 제도화하거나 상징성을 부각하는 데 치중되어 추진됐음**
  - 정권의 국정운영을 제도화하려는 목적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강했고, 산업·기술·환경이 교차하는 복합정책 수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연계구조와 기능적 정합성 확보에는 소홀했음
  - 예로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등이 정책대상, 기술변화 속도, 정책 주기 등에서 이질적 특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시 이들 간 연계성과 정책실행의 정합성 확보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부처 간 기능 중복, 역할 충돌, 정책 단절, 조정비용 증대 등 구조적 병목현상이 누적되었음

- 따라서 향후 정부조직개편은 정권 교체기 반복되는 형식적 직제 개편이나 물리적 개편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과 전략적 환경 적응을 가능케 하는 정책기능 중심의 재설계 원칙으로 접근되어야 함
- 즉, 정부조직은 기능 간 정합성과 실행 연계성 확보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복잡화·융합화된 정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통합형 실행 거버넌스 체계로 진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목표와 기능 간 정합성을 중심으로, 정책기획-정책연계-정책조정-정책집행 등 전 주기를 고려한 정부조직 재설계 원칙 확립이 시급함

## 2. 연구배경과 분석 틀

- 정부조직개편은 단순한 기구 정비를 넘어, 정책효과성, 집행효율성, 정치적 정당성 등 다차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 과정에서 조직 간 기능 중복, 정책적 간극, 권한 분산 등 구조적 병목을 해소해야 함
- 구조적 문제는 단순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정책기능별 속성과 상호 작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
- 정부조직은 정책목표를 구조화하고 기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하며, 정책기능의 변화나 연계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조직 구조도 이에 따라 재설계되어야 함(박천오, 2011)
-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은 정태적 기구 정비가 아닌, 동태적 정책 대응체계의 재설계로 이해되어야 함(서재호 외, 2018)
- 정부조직개편은 ▲신설, ▲유지, ▲폐지, ▲승계(기능 이전·재배열)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책실행의 시너지와 협업 가능성 확보 여부가 핵심 평가 기준임(Rolland et al., 2011)
- 정부조직개편은 다차원적 기준에 따라 추진·평가되어야 하며, 정책 효과성과 정치적 전략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프레임이 필요함
- 정부조직개편 기준으로는 ▲분화의 원리와 ▲통합·조정의 원리가 제시되며, 이는 기능 재배열과 조직 간 연계체계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작동

- ‘분화의 원리’는 유사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기능을 기준으로 조직을 세분화해 전문화와 기능 명확성을 확보하는 설계 원칙이며, ‘통합·조정 원리’는 분화된 기능 단위들이 상호 충돌 없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원리(박천오, 2011; 문명재, 2009)
- 오늘날과 같이 정책영역이 복합화·융합화된 환경에서는 이 두 원리를 병행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함(서재호 외, 2018)
- 정부조직개편 효과 평가는 단일 차원이 아닌 ▲투입 측면 효율성, ▲산출 측면 정책 효과성, ▲정치적 전략성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간 균형이 조직설계의 합리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됨
- 일례로 자원 효율성을 앞세운 조직통합은 중복 해소에는 효과적이거나, 기능 간 이질성이 크면 정책집행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음(윤주철, 2012)
- ▶ 최근 글로벌 차원으로 산업정책의 전략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정책목표-수단-실행체계를 포괄하는 정부조직 및 거버넌스 재설계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IMF, 2024; OECD, 2022)
-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리스크 등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면서, 산업정책은 단순한 기술진흥이나 제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성과 복원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영역으로 재정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책설계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조직 또한 다기능·통합형 체계로 재편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산업정책의 목표와 전략 수단의 재배열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실행 구조와 조직 거버넌스 혁신 필요성이 강조됨(OECD, 2022)
- 이러한 인식 속에서, 최근 산업정책 연구들은 기존의 부처별 기능 분할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기획-정책연계-집행-피드백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략적 실행 플랫폼으로서 정부조직 체계의 전환을 요구함
- OECD(2022)는 이러한 거버넌스 혁신 논의를 대표적으로 반영하며, 산업 정책 조직개편의 핵심 조건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함

- ① 전략적 기획 기능의 내재화: 산업정책을 국가 차원의 미션 기반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 비전 설정, 장기 로드맵 수립, 부문 간 연계 전략 기획 기능이 정부조직 내에 제도화되어야 함
- ② 부처 간 수평적 연계 및 정책 일관성 확보: 산업, 기술, 환경, 노동 등 여러 분야가 교차하는 정책 특성상, 전통적인 수직적·부처별 관할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목표 간 조정과 연계를 위한 수평적 협의·공동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③ 민관 협력 기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구축: 산업정책은 더 이상 정부 단독으로 기획·집행할 수 없으며, 기업, 학계, 연구기관, 지방정부, 시민 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협력 기반 구조가 요구됨
- ④ 정책조정 및 학습 역량의 제도화: 산업정책은 기술과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조정과 경로수정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유연성, 실험성, 적시성 확보를 위한 정책학습 체계 내재화가 핵심임
- 이와 같은 핵심 요건들은, 산업정책을 특정 산업이나 기업지원을 넘어, 국가 전략을 설계·조율하는 기능적·조직적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운영원리로 작동함
-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은 정책기능과 조직구조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설계 행위이며, 정책목표 변화, 기능 간 연계 요구, 정책대상 및 집행 주기 간 정합성 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
- 산업정책은 기술, 환경, 기후, 통상 등 다양한 정책 목적과 기능이 교차하는 복합정책으로, 조직개편은 단순한 물리적 조정이 아니라 정책기능의 전략적 재배열과 실행 구조의 유기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함
- 기술개발과 산업지원, 환경규제와 탄소중립, 공급망 정책 등 정책주기·대상이 상이한 기능들이 병존하는 산업정책 영역에서 기능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협업 비용 증가, 집행 병목, 정책효과 분절화 등이 발생할 수 있음(조재한 외, 2022)
-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관련 정부조직개편은 단기적 정치 논리에 의해 반복적으로 추진됐으며, 그 결과 기능 정합성과 정책수요 대응 역량이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한계가 고착화됨**

-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국정 운영목표의 상징화, 정권 정통성 확보, 구조 개혁 이미지 제고 등 정치적 목적에 의해 주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책기능 간 정합성이나 실질적 정책수요 대응력은 후순위로 밀렸음
- 정부조직개편에는 기능의 전략적 재배열, 협업 기반 설계, 비용-편익 분석 등을 포함한 일관된 설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정권별 구상에 따라 임의적으로 추진된 경우가 다수였음
- 개편과정에서 정책기능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부처 간 역할 조정 절차는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았고, 대부분 대통령직인수위나 청와대 주도로 단기간 내 구상·결정되는 패턴이 반복됨
- 하드웨어 중심 통합·분리 방식이 반복되었으나, 조직문화 융합, 내부 운영체계 정비, 기능 간 역할 정립 등 소프트웨어적 정비는 간과되어 실질적 집행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음
- **정부조직이 단절적·기능 분할적·단기 대응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재편됨에 따라, 첨단제조 육성,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장기 전략과제의 일관된 추진과 실행 기반 마련이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복합적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한 현재, 기존의 기능 분할적 정부조직 체계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이러한 문제의식은 물리적 조직통합이나 기능 명칭 변경을 넘어서, 정책 기능 정합성과 집행주기 간 연계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 거버넌스 구조개편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함
- 나아가, 산업정책 거버넌스 및 정부조직개편은 임의적·단기적 조직 변경이 아니라, 정책목표, 기능 속성, 정책대상과 수요, 집행구조, 협업체계를 아우르는 전 주기적 분석에 기반해 설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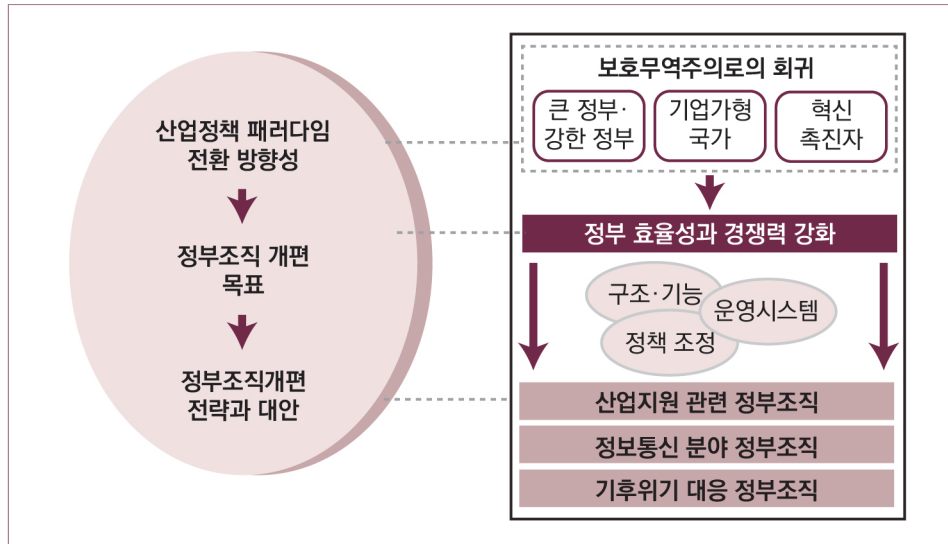
### 3. 연구목적과 범위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관련 정부 조직 운영 현황과 추진체계의 제도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탐색하고 제안하고자 함

- 산업지원, 정보통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정책 분야별 정부조직 운영상의 한계점과 구조적 제약을 고찰하고, 이들 정책영역에 걸맞은 정책추진 거버넌스 재설계 원칙과 실행 모델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분야별 정책 효과성 및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정책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기능 재편·재조정 등을 고려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탐색하고 제안하고자 함
  - 특히 상공부 체제에서 시작된 산업정책 부처가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적으로 개편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정치적 기획성과 전문성 결여라는 제도적 제약요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아울러 OECD 등 해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 동향을 조망하고, 우리나라 산업지원정책 추진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전략적이고 통합된 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 제3장에서는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 전담부처 재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안을 탐색·제안하고자 함
  - 과거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정보통신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며 정책 연계성과 집행력이 약화되었고, 이는 글로벌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부족으로 이어짐
  - 이러한 문제의식 하, 정보통신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AI와 제조업의 융합이라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전담부처의 개편 방향을 탐색하고 제안하고자 함
- ▶ 제4장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의 구조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국내 기후정책은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에너지·산업 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정책 조정력 부족 및 이행력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의 기후·에너지 부처 통합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기후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부처 신설의 타당성과 설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그림1  
본 연구의  
접근과  
개념적 틀



자료: 연구진 작성

- ▶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세 가지 핵심 전략 분야(산업지원, 정보통신, 기후·에너지)에 걸쳐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거버넌스 문제를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정부조직 개편 원칙을 탐색하고자 함
- ▶ 궁극적으로, 산업지원, 정보통신, 기후·에너지 분야 정책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02

## 산업지원 정부조직

## 1. 배경 및 현황

- ▶ 우리나라 산업지원정책 추진체계는 1948년 상공부 출범 이후 산업환경 변화와 정권별 국정 기조에 따라 개편을 거듭하며,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체계로 정착됨
- ▶ 정권별 산업지원 관련 정부조직개편은 산업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재설계라는 명분 아래 추진됨(박영원, 2022; 박천오, 2011)
  -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주도형 전략을 본격화하며 상공부의 산업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력자원부를 분리·신설함
  -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흐름과 WTO 출범에 대응하고,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개혁 기조에 따라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한 상공자원부를 출범시킨 뒤, 통상 기능을 강화한 통상산업부로 개편함
  -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능 중심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산업정책은 산업자원부로 통합하고, 통상 기능은 외교통상부로 이관하여 국제 협상력과 외교적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국정철학 아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일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기술·산업·ICT)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 지식기반경제 전환에 대응하고자 함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환원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체제를 구축하고, ICT·과학기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재정비함
  -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와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창업·벤처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정책 독립성과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윤석열 정부는 공급망 재편·기술패권경쟁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체제를 유지
- **현재 산업지원정책 추진체계는 산업부와 중기부로 이원화된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규모별 정책 수요와 성장단계별 지원 필요성에 따른 행정적 명분 아래 제도화되었음(하태수, 2021)**
  - 산업부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무역·통상 등을 포괄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지원 기능을 수행함
  - 반면, 중기부는 중소기업, 창업, 벤처,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을 담당하며, 산업부와는 다른 기능적 분화를 이루고 있음
- **최근 글로벌 산업정책 논의에서는 기업 규모별로 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하는 방식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 디지털 전환, 공급망 회복력, 탄소중립 대응 등 오늘날 산업정책의 핵심 전략과제는 산업 전반의 연계성과 가치사슬 중심의 접근을 요구하며, 이는 기업 규모나 법적 지위 구분을 넘어서는 협업 구조 구축을 전제로 함
  -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지원정책 추진체계는 여전히 기업의 법적 지위나 규모 기준에 따라 분절화된 정책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기업 간 기술연계, 정책수단 간 정합성이 약화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 집행 또는 정책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됨
-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산업정책의 목표 설정과 집행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보다 산업 간 연계성, 기능적 연속성, 산업생태계 중심의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
  - 이는 산업정책의 전략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한 조직 간 기능 분할을 넘어, 정책 수요에 기반한 유기적 연계 구조 설계와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이 같은 논의는, 우리나라 산업지원 정책 거버넌스 체계 역시 산업생태계 중심으로 기능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성을 시사함**
  - 기존의 이원화된 부처 구조는 정책 대응 속도, 조정 역량, 성과확산 측면 등에서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향후 복합적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보다 통합된 실행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2. 현 거버넌스 체계 진단과 정책문제 탐색

- ▶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에서, 기술·산업 간 연계성과 산업생태계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로의 이행이 강조됨**

  - OECD(2023, 2022) 등은 산업정책 재설계 기준으로서, 산업생태계 기반의 전략 기획과 정책수단 간 유기적 연계를 제시하고, 선별적 기업 지원 중심의 전통적 접근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함
  - 특정 기업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시장 왜곡과 혁신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실증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함
  - 성장 억제, 편법 유인, 생산성 저하, 혁신 투자 및 스케일업 회피 등 규모 기반 정책이 유발하는 역기능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며, 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모 기준보다 질적 역량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Bravo-Biosca, 2016; Aghion et al., 2015)

**표1**  
기업 규모 기반  
지원정책의  
부작용과 정책  
유인 왜곡  
메커니즘  
유형 정리

| 구분            | 정책 유인 왜곡 메커니즘                                                   | 정책적 시사점                                             |
|---------------|-----------------------------------------------------------------|-----------------------------------------------------|
| 성장 억제         | 지원 기준 초과 시 규제 또는 행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의도적으로 고용·매출 확대를 유예하거나 정체시킴 | 급격한 기준 차등은 스케일업 유인을 차단하므로, 점진적 지원체계와 유연한 인센티브 설계 필요 |
| 제도 회피 및 편법 유인 | 고용 축소 신고, 매출 분산, 법인 분할 등 기준 체류를 위한 회피 전략 채택                     | 경직된 기준 완화, 행정 감시 체계 보완, 통계 관리 강화 등 제도적 정비 필요        |
| 생산성 저하        | 고생산성 기업은 기준 초과를 우려해 성장을 억제하고, 저생산성 기업은 계속 잔존                    | 공정 경쟁 기반 및 자원 재배치 수단 (퇴출·창업 유연화 등)과의 정책 연계 설계 필요    |
| 혁신 투자 위축      | 제도 기준 초과 시 R&D 보조금, 세액공제 등 혁신 인센티브가 사라지며, 혁신 투자 유인이 약화          | 기술 역량·성장성 중심의 질적 지표 기반 지원 체계로의 전환 필요                |
| 스케일업 저해       | 중간 규모 진입 시 불이익 우려로 기업이 의도적 성장 회피                                | 이분법적 규모 구분이 아닌, 성장단계 연계 기반의 맞춤형 지원 구조 설계 필요         |

자료: 연구진 작성

- ▶ **이에 따라,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이 단일 전략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기획·운영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산업정책 재설계 관련 논의에서는 정책수단을 ▲‘기업 내부 역량 강화형’<sup>1)</sup>과 ▲‘자원 재배치형’<sup>2)</sup>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음

1) 기술개발, 인재 양성, 인프라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개별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둠

2) 비효율 기업 퇴출, 창업 활성화, 시장 진입 규제 완화, 공정경쟁 기반조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예로, 기업 내부 역량 강화만 이루어지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시장 잔존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되며, 반대로 자원 재배치 구조만 작동할 경우 유망 기업이 성장 기반 없이 시장에서 이탈할 위험이 커짐
- 이러한 흐름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간 전략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형 거버넌스 체계가 다층적 정책목표 달성의 핵심 기반임을 시사함
- 일본과 독일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대표 사례로,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 산하에 중소기업청을 두고 정책기획-집행을 일원화하고 있음. 독일은 2021년 경제기후보호부(BMWK)로 부처를 재편해 산업·에너지·기후·중소기업 정책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 미국과 스페인 등은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을 범정부 조정 또는 부처 내 협의의 구조를 통해 연계하고 있음. 예로 미국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전략적 산업정책 조정을 수행하며, 중소기업청(SBA)을 통해 기업지원정책의 집행 기반을 확보
- 유럽연합과 영국 등은 산업정책, 기업정책, 무역정책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층적 전략목표를 통합적으로 추진함. 예로, 영국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와 국제무역부(DIT)를 중심으로 산업정책과 무역정책,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정책 간 연계 강화, 실행조정력 확보, 자원배분 효율성 향상을 통해 전략목표의 일관된 추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
-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지원(산업부 담당)과 기업지원정책(중기부 담당)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기능·책임이 분절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OECD(2021)는 우리나라가 기업지원정책을 별도 전담부처 체계로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지적하며, 이는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간 연계 단절의 제도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함

표2

해외 주요국  
기업지원정책  
추진체계  
거버넌스 유형과  
특성

| 구분             | 주요 설명                                                      | 해당 국가 예시                                      |
|----------------|------------------------------------------------------------|-----------------------------------------------|
| 전담 부처형         | 중소기업 및 창업 정책 등 기업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부처와 장관이 존재                | 대한민국                                          |
| 차관급 책임형        | 산업·경제 부처 내 중소기업 정책 전담 차관 또는 국무 차관급 인사가 배치                  |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칠레 등                          |
| 통합 담당형         | 중소기업 정책이 산업·무역 등과 통합되어 하나의 부처 내에서 관리                       | 독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             |
| 비전문화 및 부차적 담당형 | 중소기업 정책이 특정 부처에 명시되지 않고, 디지털·혁신·지역 정책 등 범주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다뤄짐 |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
| 전담 집행기관형       | 정책 집행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별도 조직 (청 또는 공공기관)이 존재                    | 일본(METI 산하 중소기업청), 미국(SBA), 이스라엘, 터키, 코스타리카 등 |
| 일반 기업지원기관 활용형  | 모든 기업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범용 기관이 중소기업 정책도 함께 수행                  |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

자료: OECD(2021) 기반 재작성

### ▶ 산업부-중기부 간 기능 분산과 정책 관할 경계의 불명확성은 전략 부재와 정책 충돌을 유발하며, 실행 정합성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 2017년 중소기업청이 중기부로 격상될 당시, 산업부와 의 산업지원정책 기능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추진됨
- 이후, 양 부처는 핵심 산업정책 영역(예, 스마트공장,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등)에서 유사 목적의 개별 사업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목표 충돌, 사업 내용 중복, 예산 투입의 비효율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산업부는 기술개발,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산업 기반 중심’ 접근을, 중기부는 창업, 벤처, 강소기업 중심 ‘정책대상 중심’ 접근을 취해왔으며, 이로 인해 동일 수혜 대상 기업에 대한 정책이 중복되거나, 사업 간 목표와 수단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지속됨
- 일례로,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대응과정에서 양 부처는 동일한 산업위기에 대해 개별 정책수단을 병렬적으로 운영하며, 기능 중복 문제를 구조적으로 드러냄<sup>3)4)</sup>. 이를 계기로 정부는 ‘중소기업지원 사업 사전협의제’를 시범 도입, 예산편성 전 협의 메커니즘 마련에 착수함

3) 산업부는 기술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국가산업 전략적 관점에서 대규모 R&D 투자, 핵심 기술 확보, 인프라 조성 중심의 프로그램을 추진한 반면, 중기부는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등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화 및 성장 지원에 집중함. 이 과정에서 동일 기업군에 대한 중복 지원, 정책대상의 중첩, 유사한 지원사업의 분산 추진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책효과 분산과 성과평가 단절 문제가 지적됨

4) 또 다른 사례로, 2020년 정부가 추진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이른바 ‘BIG3’ 산업 육성정책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산업부와 중기부 간 정책추진 권한 경합 지점으로 부각됨. 당시 산업부는 주로 핵심 기술개발과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한 반면,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공급망 내 경쟁력 강화 등 기업정책 중심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함

-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전략적 기획의 일관성과 정책실행의 정합성을 저해하며, 중복 투자와 분절적 성과관리 등으로 인해 산업지원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김선영 외(2020) 등은 정부의 유사·중복 사업조정이 전체 산업지원 예산 대비 매우 제한적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함. 이는 부처 간 이해충돌과 조정 기제의 실행력 부족으로 정책기능 통합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병렬적 정책 설계가 지속될 경우, 기업은 높은 탐색 비용과 낮은 수혜 체감을 경험하게 되며, 정책효과는 분산되고 산업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또한 구조적으로 저해될 수밖에 없음
- ▶ **현행 정책조정 메커니즘은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력기반 구축과 정책 통합 실행 등에 있어 한계를 보임**
  -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 등 제도적 조정 장치가 존재하나, 형식적 운영에 그치며 실질적인 정책조정 및 연계·통합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사전협의제는 대개 신설·변경 사업에 한정되고, 기존 사업 구조조정은 협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정책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재설계가 제한됨
  - 아울러, 일부 부처는 사업 성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협의 절차를 회피하거나, 실질적인 논의를 형식적 요건 충족 수준으로 대체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조정력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음
  - 실시간 조정체계나 강제성 있는 집행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 1~2회 수준의 심의회 운영은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안승구 외, 2021)
  - 이처럼 제도적 조정 기제가 정책기획 단계에서의 전략적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후적·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구조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를 유발할 뿐 아니라, 부처 간 상호 신뢰·협력기반의 약화로 이어짐
  - 다부처가 동시에 기업지원정책을 설계·집행하는 다중심 정책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각 주체 간 조율과 협업을 위한 통합적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나, 현행 체계는 이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됨(김선영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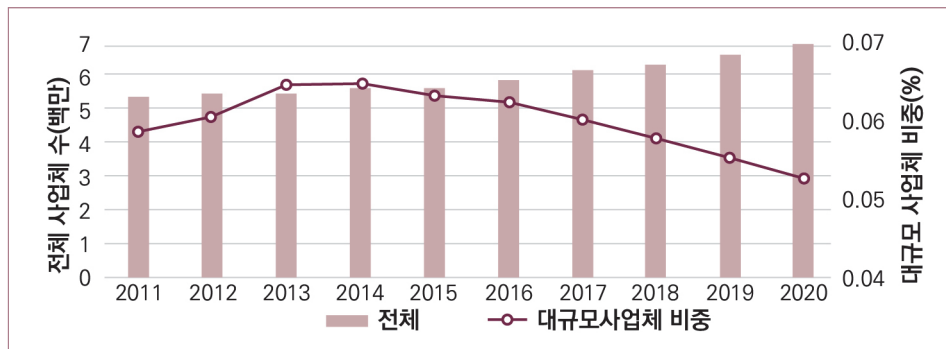
▶ **단편적 조정 시도는 구조적 개선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 기능 통합 및 전략적 협업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산업부와 중기부 간 기능 중첩 해소를 위한 조정 노력은 일부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으나, 근본적 개선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예로, 2024년 국장급 인사교류는 양 부처 간 정책 이해 제고를 위한 조치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에 중기부 출신, 중기부 규제자유 특구기획단장에 산업부 출신을 배치한 전략적 교차 인사였음
  - 이는 일시적·단편적 접근에 머무를 뿐, 실질적인 정책설계, 자원배분, 집행체계 전반의 연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적 병렬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됨(뉴스핌, 2024)<sup>5)</sup>
- 사업 단위에서도 일원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제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 통합체계의 제도화로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일례로, 올해부터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중기부·환경부의 유사사업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됨
  - 이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례에 불과하며, 다른 전략산업(예, 스마트제조, 소·부·장 등)은 여전히 부처별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조율 수준의 부처 간 협업에서 벗어나, 정책 전주기(기획-집행-성과관리)를 아우르는 연속적·통합적인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최근 산업부는 2020년 대비 2023년 중소기업 대상 R&D 예산을 약 6,300억 원 증액(비중 39.8%→41.0%), 중견기업 R&D 예산은 약 3,300억 원 증가(비중 11.9%→15.0%)시키며, 전통적인 산업 기반 중심 정책에서 기업지원 기능까지 점차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중기부 역시, 중소기업 대상 R&D 예산을 약 3,900억 원 증액하며(87.6%→89.0%), 일관된 집중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5) (2024년 기준) 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39.48%)와 산업통상자원부(16.13%)가 전체 예산의 약 55.6%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양 부처가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재정 권한을 양분하고 있으며, 그만큼 정책 기획과 사업 집행에서 상호 중첩과 기능 경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향후 양 부처 간 전략적 분업 체계 정립과 실질적인 정책조정 메커니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기업 및 산업지원정책의 통합성과 실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음

- 이처럼 두 부처가 유사한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자원 분산과 정책목표 간 충돌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음
- ▶ 우리나라 산업지원정책 추진체계는 기능적 분절로 인해 정책 수요자인 기업의 성장경로 연계와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우리나라 산업지원정책은 기업의 생애주기별 연계 구조가 미비하여, 창업 이후 성장단계로의 이행을 유기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 중이며, 이는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중견·대기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시사(조재한 외, 2022)
- 현행 정책은 창업과 생존 중심에 집중되어 있으며, 성장 단계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연계 설계가 미흡함을 시사함

그림2  
본 연구의  
접근과  
개념적 틀



자료: 조재한 외(2022), p.20

- ▶ 창업 이후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정책 단절은 기업 성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산업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함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전환 구간(연 매출 2,500~3,000억 원) 기업들이 매출·영업이익 측면 역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정책적 사각지대 기업들이 스케일업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
- 이는 정책지원 체계가 기업의 특정 규모를 초과하면 급격히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지원의 경계 구간’ 문제와도 연계됨(국회예산정책처, 2025)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33.8%로 OECD 평균 (45.4%) 대비 11.6%p 낮고, 조사 대상 28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이는 단순 창업 촉진에 아닌, 기업 성장과정 전반을 고려한 정책구조 개편 필요성을 시사함

표3  
기업 매출  
구간별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  
(단위: %)

| 구분          | ~<br>1,500억 | 1,500~<br>2,000억 | 2,000~<br>2,500억 | 2,500~<br>3,000억 | 3,000~<br>3,500억 | 3,500~<br>4,000억 | 4,000~<br>5,000억 | 5,000억~<br>1조 원 | 1조 원<br>~ |
|-------------|-------------|------------------|------------------|------------------|------------------|------------------|------------------|-----------------|-----------|
| 매출 증가율      | 3.0         | 2.1              | 0.5              | △1.4             | △0.5             | 1.5              | 0.4              | 0.6             | 1.8       |
| 영업이익<br>증가율 | △0.4        | 2.3              | △0.7             | △15.8            | △15.6            | △8.0             | △4.3             | △0.4            | 0.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 p.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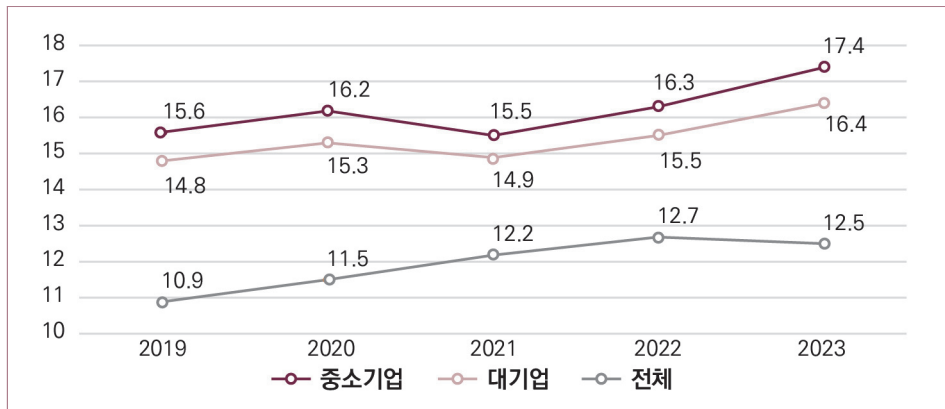
❖ 성장단계 전환 구간의 정책 미비는 기업의 스케일업 회피 전략을 유도하고, 산업 전반에 ‘피터팬 증후군’ 확산과 구조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일정 규모를 초과한 기업은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주요 정책 지원에서 배제됨. 이에 일부 기업은 스케일업보다 ‘지원 자격 유지’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임(한창용 외, 2024)
- 산업부(2024)에 따르면, 중견기업 약 6.1%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유로는 ▲조세지원 축소(60.8%), ▲적합업종 규제(14.9%), ▲금융지원 축소(14.2%), ▲공공조달 제한(6.3%) 등이 지목됨
- 이에 중견기업은 자본력과 기술 역량 측면에서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주요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중적 제약 구조에 놓여 있음
- 중기부는 창업 및 초기 기업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를 넘긴 기업에 대한 정책적 연계가 부족하여, (중견기업 지원 담당) 산업부 체계로의 전환 시 지원 공백이 발생(박찬수 외, 2018)
- 산업부의 중견기업 정책 역시 고도화 투자, 글로벌 확장, 기술 기반 경쟁력 강화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전략성과 실행역량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김민호, 2024)
- 이는 기업이 성장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제도적 보호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키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역선택 구조를 초래

❖ **전략적 선별지원 부재와 보편지원 중심 정책구조는 고성장기업 육성을 저해하고, 산업 전반의 자원배분 비효율성과 산업 역동성 저하를 초래함**

- 우리나라 기업지원정책은 전략적 선별지원보다 단기·소액 중심의 ‘보편 지원’에 집중되고 있음(안승구 외, 2021)
- 예로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과제는 평균 기간 1.1년, 과제 규모 1.1억 원에 불과하며, 산업부의 평균 3.3년·5.3억 원 대비 지원기간·규모 측면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안승구, 2019)
- 이로 인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고성장 잠재기업조차 단기·소액 사업에 머물게 되어, 기업의 혁신역량과 지원수준 간 불일치가 발생함
- 저변확대 중심 ‘단순 살포형’ 지원체계는,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반복적인 생존 목적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실질적 산업 파급력을 지닌 고성장기업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그림3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2024) 재정리

- 성장성과 혁신역량이 미흡한 ‘한계기업(zombie firms)’은 정책금융과 재정지원에 지속 의존함으로써 산업 내 자원 재배분과 구조혁신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한국은행, 2024)
- 국내 한계기업 수는 2015년 2,688개에서 2023년 3,950개로 급증, 퇴출되지 않고 장기 존속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동태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4; 한국은행, 2024)
- ‘저생산성 기업 생존-고성장기업 소외’의 이중 구조는 산업지원정책의 선순환 생태계를 차단하는 병목으로 작용함

- ❖ **산업지원정책의 기능적 분절과 정책수단 연계 부족은 ‘혁신의 고립’ 현상을 심화시키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기술혁신 성과확산을 제한하고 있음**

  - 중기부는 개별 기업의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 산업부는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확산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책기능이 분절됨에 따라, 이들 간 전략적 연계 부재와 정책수단의 비대칭성이 구조적 한계로 작용함
  - 그에 따라,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및 시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파이프라인이 부재하고, 고성장 잠재기업조차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됨(조재한 외, 2022)
  - 기술사업화 정책 등은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법령과 계획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처 간 기능 중복, 연계 단절, 정책 일관성 결여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일례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이 범부처 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술이전법」(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법」(중기부) 등 개별 법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자체 사업을 병렬 추진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중복성과 행정 비효율성 심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음(손수정, 2020)
  - 산업부-중기부 간 유사 기능 병렬 운영과 중앙-지방 간 이원화된 집행체계는 지역산업정책의 일관성과 집행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동
  - 산업부는 광역 중심 산업거점 조성, 중기부는 기초 기반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나, 유사 기능 부서 간 조정 부재와 특별구역의 개별 운영으로 정책 중복과 실행력 저하가 지속됨<sup>6)</sup>
  -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이 일회성 프로젝트로 종결되거나 산업생태계 내 확산 없이 기업 내부에만 축적되는 '혁신의 고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도 제한됨
- ❖ **중기부 내 상이한 정책기능의 병존은 정책목표 정합성 저해 및 집행체계의 구조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6) 예로,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와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 등 유사 부서가 병렬 운영되며 전략 및 집행체계의 연계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이 대두. 나아가 경제자유구역(산업부)과 연구개발특구(중기부·과기정통부)는 기능상 상호보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통합 기획 없이 부처별 개별 추진됨에 따라 시너지가 미흡한 문제가 지속됨(뉴스핌, 2024)

- 중기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창업·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산업정책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이 두 정책기능은 정책대상, 목표, 실행 논리가 본질적으로 이질적임에도 동일 부처 내 병렬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책목표 간 충돌과 집행체계의 혼선이 구조화되고 있음
  - 소상공인 정책은 지역상권 보호, 고용 안전망, 생계형 자영업 안정 등 복지 및 생활경제적 접근이 핵심인 반면, 창업·벤처 정책은 기술혁신, 민간투자 유치, 고성장기업 발굴 등 성장 중심 산업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이러한 구조적 이질성은 정책기획의 정합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원 배분과 집행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음
  - 이에 따라, 정책기능의 성격에 따른 기능 분화 및 전담 조직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 실행역량과 목표 정합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 논의로 확장되고 있음(이데일리, 2025)

### 3. 개편안 검토

- ▶ **현행 산업지원과 기업지원정책의 이원적 운영체계는 글로벌 산업정책 전환 흐름과 괴리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통상질서 변화와 산업생태계 전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산업부와 중기부의 이원화된 정책기능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체계 단절, 정책수단의 파편화, 정책기능 중복 등을 유발하며, 산업지원정책의 전략성과 집행 효율성을 저해함
  - 특히, 기업 생애주기 경로와 기술개발-사업화-시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정책 흐름이 단절되면서, 고성장 잠재기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한계기업은 반복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됨
- ▶ **산업지원과 기업지원정책의 통합적 설계와 기획-집행-성과관리 전 주기를 포괄하는 실행체계로의 전환은, 산업혁신 생태계 전반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핵심 과제임**
- 기업규모별 지원 전담부처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기업혁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파급효과가 제한되며, 산업혁신 생태계의 선순환이 작동하기 어려움

- 글로벌 주요국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을 단일 전략체계 하에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목표의 일관성 확보, 실행력 제고, 자원배분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 중임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정책과 기업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기반 거버넌스 전환이 필수적임
- 이러한 통합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조직 재설계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전제로 작동해야 함
- **그에 따라,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합해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혁신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고 복합화된 정책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에 산업부를 중심으로 중기부의 핵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하는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산업기술 R&D, 창업·벤처, 중소·중견기업 성장, 기술사업화 및 확산, 지역산업정책 등 기능별 연계성을 고려한 일관된 조직설계를 통해 전 주기 정책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함
-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기능 재편 및 전략적 통합은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 전환과 혁신생태계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하고, 창업-스케일업-고도화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경로와 산업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정책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함
- 산업지원정책과 기업지원정책의 유기적 통합과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사업화-시장 확산까지 이어지는 정책 파이프라인을 전주기적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정책의 전략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함
- 혁신역량 중심 선별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중복·분절된 정책수단을 통합하여 정책기획-예산-집행 간 정합성과 정책 파급력을 제고할 필요
- **산업부와 중기부 통합을 바탕으로 산업지원정책의 전략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은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기능의 정합성과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중기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정책은 창업·중소기업 성장지원 기능과 정책목표, 실행 논리가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산업정책과의 통합과정에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은 별도 ‘청’ 단위 조직(‘소상공인청’)으로 독립시켜, 생활경제 기반 정책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4. 소결

- 현행 산업부와 중기부의 기능 분할체계는 산업지원정책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실행체계 구축을 어렵게 하며, 산업정책 전반의 전략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정책기획-집행-성과관리 전 주기를 관통하는 실행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성이 대두
- 이에 따라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합해 주요 산업지원 정책기능을 목적별로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이질적 정책영역은 별도 전담조직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안함
- 이는 단순한 정부조직 통합을 넘어, 정책 간 연계성과 자원배분의 전략성을 확보하고, 산업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함
- 산업기술개발, 기업 생애주기 지원, 기술사업화, 지역산업정책 등 주요 정책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재편하여, 정책 파이프라인의 연속성과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통합형 정부조직 개편은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략성·실행력·효과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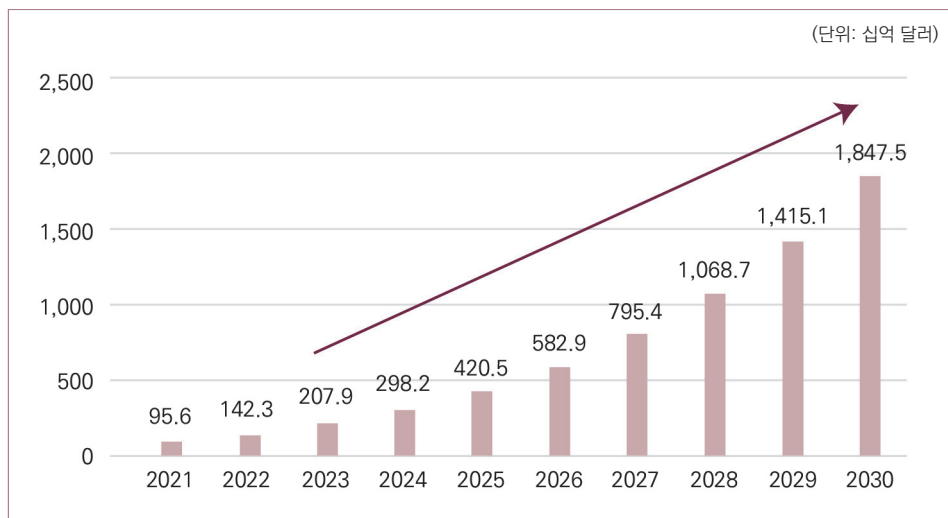
## 03

## 정보통신분야 정부조직

## 1. 배경 및 현황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AI이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AI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AI와 기존 산업의 연계가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 필요
- 90년대 정보화 이후 정보통신 분야는 빠르게 성장해 오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차전지 등 IT 관련 첨단산업을 이끌어 왔음
- 앞으로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며,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23년 2,079억 달러에서 매년 약 37%씩 증가하여 2030년 1조 8,47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4  
글로벌 AI 시장  
규모 전망



자료: 전윤식(2024), 원출처: Statista, Artificial Intelligence: in-depth market analysis

- AI는 전 산업에 걸쳐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온디바이스<sup>7)</sup> 형태로 다양한 제품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됨

7) 기기에 AI 모델을 탑재하여 자체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므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임

- AI 분야 최고 전문가인 스탠퍼드대 앤드류 응(Andrew Ng) 교수는 “AI가 전기와 같은 범용 기술로 발전하여 다양한 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이와 같이 AI는 모빌리티, 로봇, 가전제품 등과 결합하여 클라우드나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현하여 스마트한 자율운영을 가능케 함
- AI 관련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략보다는 AI와 제조업의 융합 또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등에 중점적인 투자와 지원 필요
-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며, 실제로 2010년 이후 세계 4위권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정은미 외, 2023; 원출처: UNIDO database)
- 따라서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면서, 향후 전개될 AI와 각종 기기들과의 연계라는 흐름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AI혁명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시점임
- ▶ **정보통신에 관한 지난 정부들의 역할과 성과들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글로벌 IT 변화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2000년대 후반부터 모바일 기기들과 SNS가 전 세계 IT 환경을 주도하였음
- 2007년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대중화되면서 기존의 정보통신 하드웨어가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이와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가 관련 산업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을 거쳐 2000년대 초반까지 이미 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IT 환경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음

- 정보통신 관련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차전지 등 IT 제조업은 성장하였으나,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와 융합 서비스에서 약세를 보임
- 실제로 200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등이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하고, 애플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이 전 세계 IT 변화를 이끌 당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취약하였음
- 이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같은 명확한 목표와 정보통신 분야 전담 주무부처가 없는 등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정책 기획, 집행, 평가 기능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어 정보통신 기반의 관련 산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들이 명확하게 설계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정책과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앞으로 전개될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AI 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IT와 관련 산업의 연계를 조정하고 주도해 나갈 정보통신 분야 정부조직에 대한 재설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
- 향후 글로벌 경쟁에 대한 대응은 다시 국가와 정부가 경제·산업을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과거 정보통신부가 수행 하였던 것과 같이 정보통신 분야 정책을 전담하고 이끌어갈 정부부처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임
- 특히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AI의 활용과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T와 산업을 분리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조직 체계는 점차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임

## 2. 현 거버넌스 체계 진단과 정책문제 탐색

- **현재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과거 정보통신부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상황들을 함께 살펴봄**
- 특히 새로운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사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봄

▶ 정보통신부 시절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IT 강국의 기틀 마련

- 정보통신부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IT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음
- 정보통신 분야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CDMA 세계 첫 상용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으로 우리나라는 IT·인터넷 강국의 신화를 만들었음
-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2001년 인터넷 가입자 1천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 2001년 국내 인터넷 가입자 수는 2,438만 명, 초고속 인터넷 이용가구 수는 781만 가구에 이르면서 당초 목표를 크게 뛰어넘었음(IT 데일리, 2022; 원출처: 컴퓨터월드 2002년 9월호)
- 정부 주도의 단기간 초고속 인터넷 환경 구축은 각종 통신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여 동남아 지역에 국산 ADSL 장비들을 수출하거나, KT의 경우 베트남, 중국 등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 경험과 국산 ADSL 장비를 한데 묶어 수출하기도 함

▶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따른 축소 지향적인 중앙정부 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었고, 현재까지 전담 단일부처 부재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네 부처에 분산 배치하였음
- 특히 이명박 정부가 방송과 통신의 정책적 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이관하면서 설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융합 정책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냄
- 박근혜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하였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됨
-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부처의 여러 기능과 업무들이 통합된 거대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나,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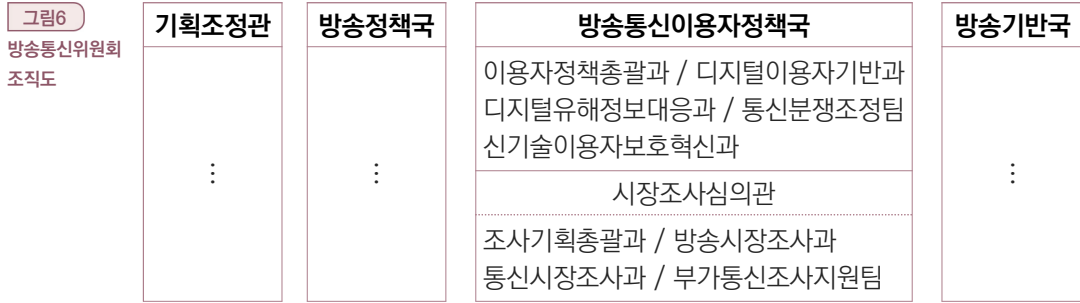
-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를 전담하는 단일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부처 개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담부처가 신설되지 않았음
- ▶ **현 정부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 결과 정보통신 정책의 “주변화” 현상 발생**
  -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을 둘러싼 정쟁에 휘말려 통신정책이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1기 출범 당시에는 위원 구성에 있어 방송과 통신 분야 인사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으나, 2기 이후 방송 분야 출신들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였음
  - 2017년 4기 위원 5명 전원이 방송 미디어 출신 인사들로 채워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통신 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 ICT 산업 관련 규제 등 통신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전자신문, 2023)
  - 또한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IT·방송·통신 심지어 일부 교육관련 업무들까지 미래창조라는 추상적인 구호 아래 만들어진 거대 공룡부처였으나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은 더욱 약화되었음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의 산업 진흥과 기술 혁신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 등을 주로 담당하고,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규제, 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정부 및 공공 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차관 아래 조직은 정보통신정책실, 네트워크정책실, 전파정책국으로 구성되며, 정보통신 및 디지털 정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통신, 방송, 전파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한편 제1차관 산하 미래인재정책국이 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AI 등 IT 분야 인재 관련 업무는 제2차관 산하 디지털인재양성팀으로 분산되어 있음

그림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조직도

| 제2차관                                           |                                                       |                                       |
|------------------------------------------------|-------------------------------------------------------|---------------------------------------|
| 정보통신정책실                                        | 네트워크정책실                                               | 전파정책국                                 |
| 정보통신정책관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 전파정책기획과<br>전파방송관리과<br>주파수정책과<br>전파기반과 |
| 정보통신정책총괄과<br>디지털사회기획과<br>디지털신산업제도과<br>디지털포용정책팀 | 네트워크정책과<br>디지털기반안전과<br>정보보호기획과<br>정보보호산업과<br>사이버침해대응과 |                                       |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통신정책관                                                 |                                       |
| 인공지능기반정책과<br>데이터진흥과<br>인터넷진흥과<br>디지털인재양성팀      | 통신정책기획과<br>통신경쟁정책과<br>통신이용제도과<br>통신자원정책과              |                                       |
| 소프트웨어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                                       |
| 소프트웨어정책과<br>소프트웨어산업과<br>디지털콘텐츠과                | 방송진흥기획과<br>뉴미디어정책과<br>디지털방송정책과                        |                                       |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                                                       |                                       |
| 정보통신산업정책과<br>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br>정보통신산업기반과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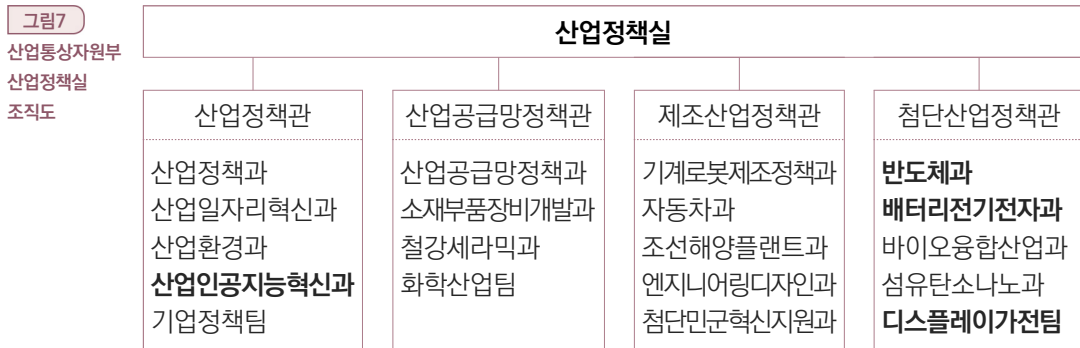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는 크게 기획조정관과 3국으로 구성되며, 이 중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이 통신 분야에서의 디지털이용, 유해정보, 분쟁 조정 및 시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업무의 대상은 방송과 통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보호와 시장조사라는 업무 목적 하에 혼재되어 있음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산하 조직은 기획조정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로 구성되며, 이 중 산업정책실 내 산업인공지능혁신과, 반도체과, 배터리전기전자과, 디스플레이가전팀 등은 정보통신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 **정보통신에 관한 정부조직과 관련 업무가 “주변화”되면서, 정보통신 정책을 선도하고, AI와 기존 산업을 연계하는 융합 정책 약화**
- 현재 어느 정부조직도 정보통신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처가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의 한 영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의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의 개별 단위로서 정보통신을 다루고 있는 상황임

### 3. 개편안 검토

- ▶ **시가 가져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정보통신 정책을 도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부처 필요**
  -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와 IT산업정책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T)을 주요 단위로 한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IT 생태계를 만들어 왔으며, 정보통신부의 IT 정책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왔고, 그 결과 IT 정보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음
  - IT와 타 기술 또는 관련 산업의 융합은 IT의 지속적인 진보와 혁신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IT를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 분야 응용 등을 선도할 부처가 없는 상황임
  - 과거 정보통신부 산하 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도 통폐합을 거쳐 여러 부처에 분산 배치됨에 따라, 정부부처 사이는 물론 부처별 소관 공공기관들 간에도 IT 생태계 내 선순환적 협동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특히 AI와 같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도전적인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와의 연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필요**
  - 정보통신 분야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분산된 정부부처는 통합 부처에 비하여 부처간 협의 과정 등이 수반되며, 일관되고 신속한 정책 결정을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성과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응용되고 시장에 나오기까지 R&D와 각 산업군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급격한 상황 변화에 산업계와 협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한편, 산업계 입장에서는 특정 이슈에 관하여 정부와의 소통과 담당 창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산업계의 수요와 현장의 민원 등이 정부 정책에 적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통합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사업자가 IT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면, 단말기 개발 및 표준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허가 및 시장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망 고도화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콘텐츠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각각 협의해야 함
- 또한 AI 등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과 상품 및 서비스가 융복합적인 특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처 간 책임회피로 인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조직 특성상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리므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통신부문에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 **부처 단위의 투자와 사업 추진에 있어 정보통신 관련 상황과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 결정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R&D와 정보통신 업무로 양분되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고유영역에 정보통신 업무를 추가하면서 어느 부처도 정보통신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음
  - 부처별 정보통신 관련 예산과 인력에 대한 투자도 미흡한 상황이고, 그 결과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9개 핵심과제로 인공지능, 전략기술, 기술사업화, 선도형 연구개발, 기초연구, 인재, 민생, 안전, 지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각 과제에 IT 관련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IT만의 정책은 인공지능이 유일함
  - 한편 정보통신 관련 R&D, 표준 개발, 인력양성 및 IT 산업의 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예산도 2022년 1조 7,532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8,592억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억원)

| 표4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최근 5년간<br>정보통신진흥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14,886 | 17,532 | 13,202 | 9,825 | 8,592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역량을 높이고, 부처 담당자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조직 체계 필요
  - AI 등 정보통신기술은 더욱 빠르게 진보하며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에 기반한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부 정책 역량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분산된 정부조직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업무가 각 부처의 최우선 순위에 있지 않으므로 부처 내 관련 실국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고, 부처 내 조직개편 또는 부서 간 기능조정 등으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음
  - 그 결과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일관성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함
  - 이명박 정부 당시 기존 정보통신부의 IT 산업정책 기능을 흡수 통합했던 지식경제부가 조직융합을 목적으로 전문분야가 서로 다른 공무원들을 뒤섞는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부처 담당자와 소통을 해야하는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의 불만이 커졌던 사례가 있음(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 2012)
  -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정보통신과 타 산업의 융합을 위하여 기존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의 정보화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고, 이후 정보화전략실은 전자정부국으로 축소되는 쪽으로 개편되어 그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음(이재호 외, 2017)

#### 4. 소결

- ▶ AI와 기존 산업, 특히 제조업과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IT와 관련 산업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됨
- ▶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조직과 소관 업무를 산업부와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AI이고, 향후 AI는 온디바이스 형태로 전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 AI는 모빌리티, 로봇, 가전제품 등과 결합하여 클라우드나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현하여 스마트한 자율운행을 가능케 함
- 이와 같은 AI와 기존 산업의 연계라는 변화와 흐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 시점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융합·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이 산업부의 산업정책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산업부와 중기부 통합에 이어 정보통신 분야 조직과 업무까지 산업부로 통합할 경우 거대부처 출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제4장에서 언급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분리하고, 통상 부문 역시 총리실 등으로 이관할 경우 그와 같은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또 다른 대안으로 “IT 및 지식정보 분야 정책을 전담할 정부조직을 신설”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위에서 제안한 산업부 통합안이 비록 에너지, 통상 부문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비대해질 수 있고, 그 결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만약 산업부와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앞서 살펴본 현행 정부조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단일 정부부처로 통합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IT 분야의 특성과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관련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음
- 다만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산업과의 연계 등 변화를 고려하여 지능정보 기술과 관련 산업 진흥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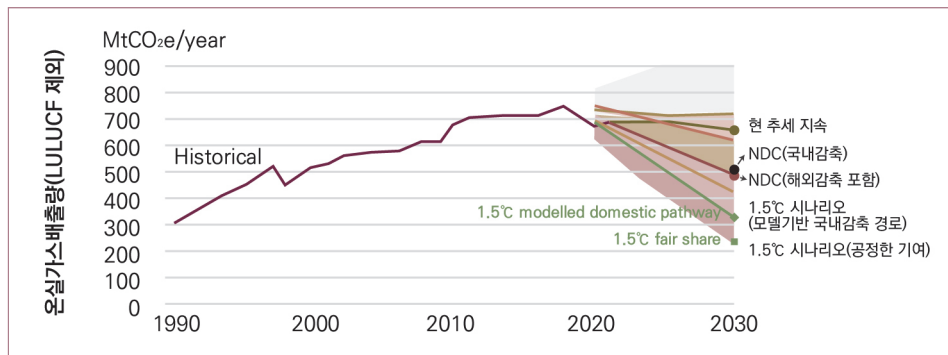
## 04

## 기후위기 대응 정부조직

## 1. 배경 및 현황

- ▶ 한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국내 2030 NDC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 목표치 상향 압력을 받고 있음
  - 한국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관계부처합동, 2021), EU (1990년 대비 55% 감축), 미국 (2005년 대비 61~66% 감축), 일본 (2013년 대비 46% 감축) 등에 비해 부족한 수준임
  - 글로벌 목표인 1.5°C 시나리오에 부합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8%~83% 감축 필요(Schmidt et al., 2024)

그림8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2030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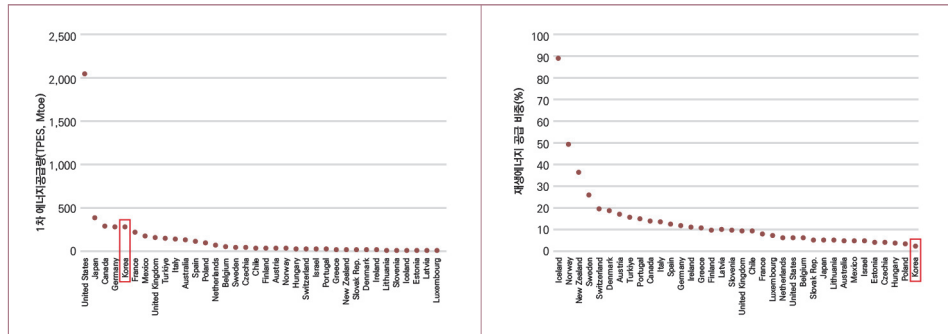


자료: CAT (2023) 국가별 보고서

- 국내 2030 NDC는 “불충분” 수준으로 평가(CAT, 2023)되나, 그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감축 속도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거버넌스 개편이 요구됨
- 2022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대비 7.6%(통계청, 2025) 감소하는 것에 그침

- 탄소중립 법제도와 정책의 양적 수준<sup>8)</sup>은 선진국과 유사하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낙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 성과지표<sup>9)</sup>에 의하면 67개 국가 중 63위로 꼴찌 수준(Burck et al., 2025)이며, “기후 악당”으로 평가받음
-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 협상을 방해한 국가에게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 1위로 한국을 선정 (오마이뉴스, 2025)
- 한국은 OECD 국가 중 1차 에너지공급량 5위 국가이나,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꼴찌로 에너지 집약적 다배출 국가에 해당

그림9  
2020년 OECD  
국가별 1차  
에너지공급량과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자료: OECD Primary Energy Supply (2020), OECD Renewable Energy (2020)

-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 경로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2035, 2040년 감축 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한국 현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sup>10)</sup>에 2031~2049년 감축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2026. 2.28.까지 2030년 이후 목표를 명문화하도록 판결함
- ▶ 국내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와 산업구조의 한계로 인하여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대전환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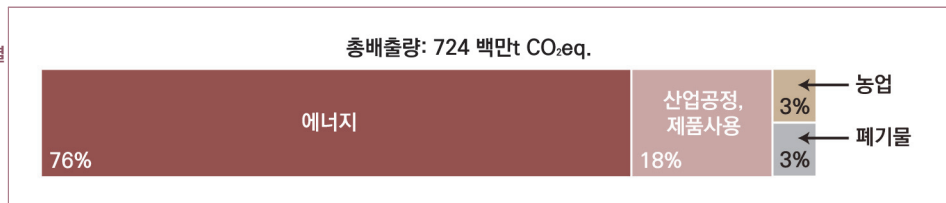
8) 한국은 2025년 기준 72개 법제도와 정책을 운영중이며, 미국 89개, 독일 91개, 중국 98개, 영국 107개, 프랑스 110개에는 미치지 못하나 국가 크기와 경제력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9)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10)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

- 전력생산에 화석연료 의존도<sup>11)</sup>가 높으며, 이에 기반한 탄소집약적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도가 높음
- 빠른 전환이 어려운 에너지(76%) 및 산업공정(18%)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4% 차지
-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선행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전환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2013)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 없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 국회예산정책처(2024)는 현재와 같은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2030 NDC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평가하였으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그림10  
2022년 배출원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환경부, 국가온실가스 통계

## 2. 현 거버넌스 체계 진단과 정책문제 탐색

- ▶ **현행 기후 거버넌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로 분리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환경부는 타 부처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하여 주무부처로서 부처 간 정책 총괄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환경부는 권한의 한계로 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

※ “11차 전기본에 신재생E 상향 환경부 주문에도 곧바로 반영 안 해, 민간 석탄 발전소 석탄 소비량 누락 등 부처 간 소통 원활치 않아”(전기신문, 2025)

11) 2023년 기준 62%(데이터 출처: IEA (2024))

- 산업부와 환경부 간의 정책 칸막이로 동일 사안에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긴밀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임

- 산업부와 환경부의 탄소중립 정책 관련 근거법·계획·통계가 달라 결과적으로 에너지 정책 부문에서 부처별 다른 정책 목표가 제시될 수 있음※

※ “산업부 환경부와 정책 목표 다르다...부처간 엇박자”(경향신문, 2014); “환경-산업부, 전력수요 예측 ‘딴판’...같은 자료로 ‘원전 12기 용량’ 차이”(경향신문, 2015)

-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해소하기 어려워 정책 시행 지연 가능※

※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는 앞서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놓고 마찰을 빚어 사실상 시행이 무산됐다. 한 관계자는 “향후 업무 조정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감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동아일보, 2015)

#### ▶ 부처간 조정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이 불투명

- 위원회 기능의 한계는 기후거버넌스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이며(강희찬 외, 2013), 현재 운영 중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기후단체에서 탄녹위가 거수기 역할만 한단 지적이 잇따르더라 정치권에서는 ‘탄녹위 개조’를 위한 법안도 논의가 되는 상황...”(세계일보, 2025)

#### ▶ 기후 거버넌스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졌으나, 부처 개편 없이 부서 단위 또는 위원회 단위 변화만 시도

- 이명박 정부(2008~2013): 기후 거버넌스의 효시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본격 추진
  -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지정,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범부처 심의
  - 한계(강희찬 외, 2013): 지식경제부와 정책 조정 실패, 부처간 갈등,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 박근혜 정부(2013~2017): 기후정책 우선순위 감소
  - 기후정책이 후순위로 밀림: 녹색성장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
  - 한계: 배출권 제도 도입 지연 및 무상할당으로 감축 수단 실행력 저하

- 문재인 정부(2017~2022): 탄소중립녹색성장 2기 시작
  -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그린뉴딜 추진
  - 환경부 주도 거버넌스<sup>12)</sup>,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직속 기구로 재개편
  - 한계: 임기 후반에 기후정책 발표가 집중되어 추진력 및 지속성 부족
- 윤석열 정부(2022~2025): 산업중심 탄소중립 정책
  - 원전확대, 재생에너지 목표 조정, 2030 NDC 산업부문 목표 완화(비즈니스 포스트, 2025)
  - 한계: 환경부의 총괄·조정 조정 기능의 취약성 문제 지속

표5

정권별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변화 내용

| 구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sup>1)</sup>         | 윤석열                       |
|-----------------------|-------------------------|-------------------------|---------------------------|---------------------------|
| 주요 근거법                | 저탄소녹색성장기<br>본법 제정('10)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br>개정('13)   | 탄소중립기본법<br>제정('21)        | 탄소중립기본법<br>개정('23)        |
| 온실가스<br>감축정책<br>총괄·조정 | 환경부                     | 국무조정실/<br>소관부처          | 환경부                       | 환경부                       |
| 배출권거래제<br>운영 부처       | -                       | 환경부→<br>기획재정부           | 환경부                       | 환경부                       |
| 온실가스종합정<br>보센터        | 환경부 소속                  | 국무조정실 소속                | 환경부 소속                    | 환경부 소속                    |
| NDC                   | (2020) BAU 대비<br>30% 감축 | (2030) BAU 대비<br>37% 감축 | (2030) 2018년 대비<br>40% 감축 | (2030) 2018년 대비<br>40% 감축 |
| 위원회 위상                | 대통령 소속<br>(조율기능有)       | 국무총리 소속<br>(조율기능無)      | 대통령 소속<br>(조율기능有)         | 대통령 소속<br>(조율기능有)         |
| 전반적 기초                | 녹색성장을<br>국가비전으로         | 기후 관련 조직 축소,<br>폐지, 격하  | 탈원전, 그린뉴딜                 | 원전확대,<br>무탄소에너지           |

주: 1)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거버넌스 개편이 없었으며, 표에 정리된 내용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진행된 사항임

자료: 김상훈 (2022) 우리나라 기후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내용에 기반하여 정리함

- 현행 기후변화 대응 조직 및 기능·인력 현황
  - 국무조정실이 부처간 조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조정을 하나 정책 이행단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
  -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 국가 및 지방 단위 계획 수립 및 정책 이행 점검 사무를 담당

12) 환경부 내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하여 기후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3. 개편안 검토

- ▶ 선거 공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해 기후 전담부처 개편안이 제시되었으나 검토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함
- 2017, 2022, 2024년 선거에서 기후 전담부처 개편안이 등장했으나 실현되지 못함

| 표6                      | 2012~2024 법률개정안           | 2017, 2022년 대선   | 2024년 총선~                         |
|-------------------------|---------------------------|------------------|-----------------------------------|
| 시기별 기후위기 대응 신설 부처 논의 대상 | 환경에너지부<br>기후환경부<br>기후에너지부 | 기후에너지부<br>에너지기후부 | 기후에너지부<br>기후경제부<br>경제기후부<br>기후환경부 |

|                                                        |        |        |     |     |
|--------------------------------------------------------|--------|--------|-----|-----|
| 표7                                                     | 환경부    |        | 산업부 |     |
| 기후위기 대응<br>정부조직 개편안<br>및 최근 논의<br>대상인 신규 부처<br>정책영역 비교 | 환경보전 등 | 기후에너지  | 에너지 | 산업  |
|                                                        | 환경부    | 기후에너지부 |     | 산업부 |
|                                                        | 환경에너지부 |        |     | 산업부 |
|                                                        | 기후환경부  |        | 산업부 |     |
|                                                        | 환경부    | 기후경제부  |     |     |

- 현행 거버넌스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유사하나 다른 방식의 정부조직법 개정안<sup>13)</sup>이 발의됨
- 정부조직 개정안은 현행 거버넌스가 정책 총괄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기에 미흡하고, 환경부의 위상과 권한 부족으로 NDC 달성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함
-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 전담부처 신설안으로 환경에너지부<sup>14)</sup>, 기후환경부<sup>15)</sup>, 기후에너지부<sup>16)</sup>, 기후변화대비처<sup>17)</sup>가 제안됨
- 부처 신설 외에 행정위원회(국가기후위기위원회)<sup>18)</sup>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지는 방안 및 환경부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개편안 또한 제시됨

13) 2012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통과된 개정안은 0건, 계류중인 법안은 4건임

14) 2012년 설총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전반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여 지경부 소관 에너지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임

15) 2021년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안, 2024년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안, 2025년 박정 의원 대표발의안에 등장한 개편안으로, 환경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유 기능에 기후 정책을 명문화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임

16) 2025년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안에 등장한 개편안으로, 해외 기후정책 및 규제 대응 주관 부처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후변화 정책 주관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임

17) 2016년과 2020년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후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신설하는 내용임

18) 2020년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강력한 기후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위원회 위상을 가지는 위원회 개편안임

- ▶ **환경부 또는 산업부 중심으로 부처가 신설되는 경우 기존 부처의 경로 의존성에 의해 기대하는 구조적 전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환경부 중심의 기후 전담 부처(환경에너지부, 기후환경부)를 신설하는 경우 환경부가 ‘규제 부처’로 인식되고 있어 에너지산업계의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 환경에너지부 신설안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2013)에 따르면 “환경 정책 추진 우선으로 에너지 정책이 소홀히 다루어질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 기후환경부의 경우 기존의 주무부처로서의 환경부 역할이 강화된 방식으로, 실질적 개편이 아닌 이름만 바꾼 개편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며, 에너지 정책영역을 뒷받침할 인력 등 강화된 위상에 부합하는 자원이 부족하여 개편 효과가 나타날지 불확실함
  - 환경에너지부가 신설되는 경우 기존 환경부의 정책영역(환경보전)과 에너지 정책 간의 이질성으로 인해 정책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도 우려됨
  - 산업부 중심의 기후전담부처(기후경제부)<sup>19)</sup>가 신설되는 경우 기후정책이 산업정책 논리에 종속될 위험이 존재
  -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관리하는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에서도 타부처 정책 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이 부족한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기후정책이 산업부로 통합될 경우 산업정책 중심의 기후정책이 기획될 가능성이 존재함
-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을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고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기도 어려워 부처가 아닌 위원회 방식을 선택할 유인이 부족함**

  -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주체는 개별 부처이므로 행정위원회가 자문 기능을 넘어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움

19)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제안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국회 토론회 및 언론을 통하여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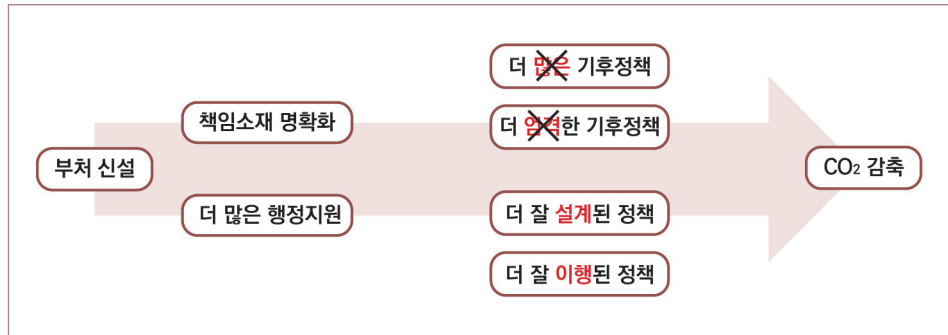
- 위원회 방식은 구성의 다양성을 통한 민주적 의견수렴과 정당성 확보에 장점이 있으나, 정부 위원회의 위원 임명권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에게 있어 시민사회 추천 등이 반영되더라도 위원회 구성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움
- **기후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 목표 간의 균형있는 기획과 집행력을 높이고, 정책 이행효과를 제고하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 통합부처 신설을 통해 현행 거버넌스의 본질적 문제인 다 배출 부문 담당 부처(산업부)와 기후 주무부처(환경부) 간 정책분절 문제 해결 가능
  - 2030 NDC와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과 기후정책의 방향성 통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므로, 현시점에서 기후 거버넌스 개편의 목적은 이러한 통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기존의 부처에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통합 효과 및 추진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후 전담부처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함
- **기후-에너지 통합부처를 신설한 해외 사례에서도 기후변화 대응력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sup>20)</sup>가 관찰됨**
- 기후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통합된 사례에서 통합부처 신설<sup>21)</sup> 전 5년간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해 신설 후 5년간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함

20) 모든 국가에 일반화 할 수 없는 정책 효과의 존재이나, 긍정적인 효과(온실가스 감축)를 '기대할 여지' 또는 우려되는 부정적인 효과(경제성장 저해 또는 에너지 안보 위협)가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해석 가능함

21) 효과적인 기후정책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부처를 신설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으며, 기후부처(dedicated climate ministry) 신설이 기후정책 이행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Limberg et al., 2024)

그림1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부처 신설 영향  
요인 모형



자료: Limberg et al. (2024) p. 2 그림을 번역함

- 에너지와 기후정책이 통합된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평균 5%→18%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달리 기존 부처를 기후정책 주무부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한 프랑스,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개편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평균 7%→6%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표8

부처개편방식에  
따른 효과 비교

| 구분                    |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 신설                                                                     | 기존 부처를 기후정책 주무부처로 지정                                                            |
|-----------------------|-------------------------------------------------------------------------------------|---------------------------------------------------------------------------------|
| 모델국가 <sup>1)</sup>    |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                                                                   | 프랑스, 일본, 미국                                                                     |
| 탄소감축 성과 <sup>2)</sup> | 덴마크: 4%→25%, 영국: 12%→15%<br>독일: 2%→10%, 네덜란드: 3%→20%                                | 프랑스: 5%→8%<br>일본: 5%→0%<br>미국: 10%→9%                                           |
| 경제 성장 <sup>3)</sup>   | 덴마크: 5위→7위→6위, 영국: 12위→18위→24위<br>독일: 20위→19위→16위, 네덜란드: 13위→13위→11위                | 프랑스: 22위→20위→25위<br>일본: 4위→5위→22위<br>미국: 8위→10위→6위                              |
| 에너지 안보 <sup>4)</sup>  | 덴마크: 69.6→74.4→80.0, 영국: 69.5→64.3→62.7<br>독일: 67.5→66.2→70.4, 네덜란드: 55.3→61.0→62.1 | 프랑스: 58.5→58.3→70.32<br>일본: 57.1 <sup>5)</sup> →57.0→56.1<br>미국: 66.0→68.5→70.2 |

주: 1) 2000년대에 경제성장(1인당 GDP)과 온실가스 배출(1인당 GHG 배출량)의 탈동조화가 진행된 국가를 대상으로 함  
2) 정부조직 개편연도(덴마크: 2007, 영국: 2008, 독일: 2013, 네덜란드: 2017, 프랑스: 2007, 일본: 2001, 미국: 2010)를 기준으로 5년전부터 개편연도까지의 감축률과 개편연도부터 개편 후 5년까지의 감축률 산정(한국의 경우 개편 전 5년: -7%, 개편 후 5년: -13%), 마이너스는 배출량 증가를 의미  
3) 정부조직 개편연도와 전후 5년도의 1인당 GDP 순위  
4) 에너지트릴레마의 energy security 점수 사용, 거버넌스 개편연도와 개편 전후 5년 점수 비교  
5) 일본의 정부조직 개편연도는 2001년으로, 가용 통계에서 5년전 데이터가 없어 가장 이른 시점인 2000년 점수를 사용함  
자료: Crippa et al. (2024)

자료: World Bank GDP per capita (current USD) 검색일: 2025.4.4.

자료: World Energy Council (2024) Energy Trilemma Index Country Report, 검색일: 2025.3.25.

-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경제성장이나 에너지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부처 통합 방식에 따라 경제성장과 에너지안보의 변화 추세가 달라지지도 않음

#### 4. 소결

##### ● 국내 탄소배출감축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

- 2030년 이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법제화<sup>22)</sup> 됨에 따라 감축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부처 개편의 주요 목표가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배출량의 절대량(76%)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을 기후 정책과 통합하는 형태의 부처(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함으로써 이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후정책이 규범적이거나 규제적인 성격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 부처 신설외 법제도 및 정책조정 메커니즘 보완 필요

- 실질적 조정 기능이 제한적인 현행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 위상을 갖는 국회 내 전문가 기구를 설립하거나 위원회를 국회의 의사결정 체계와 연계하는 거버넌스<sup>23)</sup>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 자문 기구 기능<sup>24)</sup>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부처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보고서가 국회에 보고되어 이에 기반하여 정부 질의가 진행되는 등의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갖춰질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지원하는 상설인력<sup>25)</sup> 필요함
- 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관합동 심의기구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기반 정책 성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보안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개편 및 기능 강화
- 현재 환경부 산하에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기후에너지부 산하로 이관하면서 데이터 검증을 지원할 조직을 지정하고,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22) 헌법재판소는 2026.2.28.까지 2031년 이후 목표를 탄소중립기본법상 명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23)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국가에서 의회 내에 위원회가 존재하는 사례는 없으나, 덴마크와 영국은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응답 및 국회 보고 절차가 존재하여 독립성 및 영향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

24) 2025년 출범한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4대 핵심전략에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보강이 포함(한화진, 2025)되어있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방증

25)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 사무국 직원 60명의 상설 인력으로 분석팀 45명이 정부의 기후대응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춘(이창훈, 2025)

보고하는 환류체계를<sup>26)</sup> 구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부처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견인하는 법제도 보완 필요
-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과 2050년 목표만 명문화되어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31~2049년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도<sup>27)</sup> 법제화되어야 함

26) 유사한 해외 사례로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데이터(연방환경청이 제출)를 확인, 이를 토대로 연방정부와 의회에 보고서 제출하는 역할 수행(이유진, 2025)

27) 독일은 명문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30년 65%, 2040년 88%, 2045년 100% 존재

## 05

## 제언: 산업정책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 1. 산업정책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원칙

- ▶ 글로벌 경제통상질서의 재편, 기술패권경쟁 심화, AI 혁신 가속화, 기후위기 등 복합 전략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능 간 연계성과 실행력을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재설계하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수적임
- 현행 산업정책 거버넌스는 산업지원, 기업지원, 정보통신, 기후, 에너지 등 주요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와 통합이 필수적인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구조적으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부처 간 정책기능의 중복과 충돌, 전략목표 간 불일치, 정책 파이프라인 단절 등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며, 복합적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산업정책 관련 정부조직개편은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음
- ▶ 산업지원정책의 전략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간 분산된 정책기능을 산업생태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능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형 정부조직 설계가 필수적임
- 산업지원정책과 기업지원정책을 통합하여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기업지원체계를 재구축하고, 산업생태계 중심 기능 재편을 통해 정책의 전략적 정합성을 강화해야 함
- ▶ AI 주도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이 병행되는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 등 ‘일반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기반 정책기능의 전략적 재정렬이 필요함
-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은 기존 정보통신정책의 범위를 넘어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정책과의 구조적 통합 또는 전략적 분화가 요구됨

-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산된 정책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전략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에너지와 환경 부문에 흩어진 기후 관련 기능을 하나의 전담부처로 통합하고, 감축 목표-에너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실행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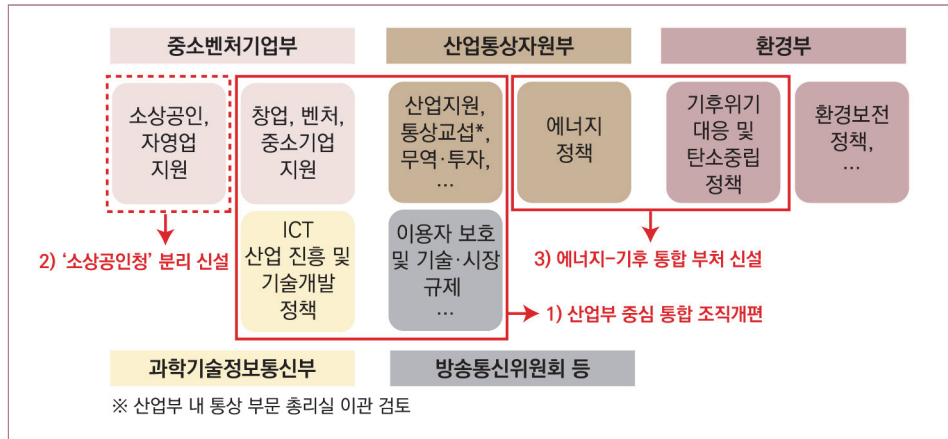
## 2.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재설계 방안 탐색과 제언

- **[산업부 중심 통합 개편] 산업-기업-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
  - **‘산업부-중기부 통합 개편’을 통한 산업-기업지원정책 간 연계성 강화**
    - 산업지원 및 기업지원정책의 통합과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혁신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산업부를 모체로 한 통합 부처(산업부-중기부) 개편을 제안
    - 중기부의 창업기업·중소기업 지원기능은 산업부와 연계하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은 별도 ‘청’(예, ‘소상공인청’) 단위로 독립시켜 전문성·실행력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산업부 중심 ‘정보통신-산업정책기능 통합’을 통한 기술-산업 전략 융합**
    - 온디바이스 AI, 스마트제조 등 미래 정보산업을 선도할 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정보통신-산업지원 정책기능을 재편할 필요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강국으로서, AI 소프트웨어보다는 제조업의 강점을 살려 AI와 산업 분야를 연계하고 융합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이에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정책기능(AI, 데이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재 등)을 산업부 산하로 이관하여, 기술-산업 연계 전략을 총괄하는 체계로 재편할 필요
  - **보완적 대안: AI 및 기술-콘텐츠 융합 중심 IT 분야 단일 정부조직 신설**
    - 부처 비대화나 기술정책의 종속 우려 등을 고려할 때, AI·SW·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대안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이에 정보통신 분야를 전담하는 부처를 두되,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산업과의 연계 등 변화를 고려하여 지능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처 신설을 제안함

그림12

산업정책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제안



#### ▶ [에너지-기후 통합부처 신설] 탄소중립 이행력 제고를 위한 부처 신설

- ‘기후(환경부)-에너지(산업자원부) 정책기능 통합’을 통한 정책 실행력 강화
  - 현행 환경부(기후정책)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부(가칭)’ 신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너지전환의 전략적 흐름을 단일 부처 내에서 총괄함으로써, 정책 간 정합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실현
- 기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위원회 기능의 보완 및 정비
  -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자문·사회적 합의기구로 기능을 정비하고, 실질적 집행 권한은 신설 부처로 일원화

### 3. 통합형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산업정책 거버넌스 혁신의 기대효과

- ▶ 정책기능 중심의 거버넌스 재설계를 통해, 산업정책 실행체계의 전략성과 일관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산업지원정책, 정보통신정책, 기후, 에너지 정책 등 분산되어 있던 전략 과제별 정책기능이 통합·연계되어, 정책 간 정합성과 일관성이 제고되고 복합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

- 산업생태계의 질적 전환, AI 기반 산업구조 재편, 탄소중립 이행력 강화 등 국가 전략과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
- ▶ **기능 중심의 정책기획 및 집행체계로의 전환은 자원배분의 전략성과 정책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동시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임**
  - 기획-예산-집행-성과관리 전 주기를 포괄하는 기능 중심 정부조직 재설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수직적 정렬성과 수평적 연계성이 확보되고, 기능 간 중복과 충돌이 구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한정된 재정·인력·정책수단의 전략적 배분이 가능해지며, 정책추진의 연속성과 누적효과가 강화되고, 국민 체감도 및 정책신뢰성 또한 실질적으로 제고될 것
- ▶ **나아가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 정부조직개편은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임**
  - 부처 간 기능 분절 해소와 정책목표 중심 기능 재설계 및 추진체계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산업정책의 전략성과 적시성을 구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

## 참고문헌

- 강희찬 외(2013)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 사회 비전 마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관계부처합동(202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 관계부처합동(2023)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2012) “효율적 국정관리를 위한 정부조직”.
-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2024) “NABO 경제동향”.
-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IV. 지속성장”.
- 김민호(2024)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김상훈(2022) “우리나라 기후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선영 외(2020) “중소벤처기업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1권 제1호, pp.39-59.
- 김수원 외(2017) “새 정부의 ICT·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54, 4, 5-34.
- 노웅래 외(20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문명재(2009)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제4호, pp.23-41.
- 박영원(2022)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이슈와 논점」, 1938호, 국회입법조사처.
- 박천오(2011)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보」, 제8권제1호, pp.1-30.
- 박찬수 외(2018) “중견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손수정 외(2020)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서재호 외(2018) “보건복지부 조직의 분할 가능성: 제기된 대안의 평가와 전망: 제기된 대안의 평가와 전망”, 「한국조직학회보」, 제14권제4호, pp.75-103.
- 안승구(2019) “정부의 중소기업 R&D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전략성 분석과 제고방안”, 「KISTEP Issue Paper」, 274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안승구 외(2021)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의 주요 이슈와 정책 제언”, 「KISTEP Issue Paper」, 304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안전행정위원회(2013)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윤주철(2012) “정부 조직개편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중앙행정조기 실증분석 (1948-2010): 한국의 중앙행정조기 실증분석 (1948-201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제2호, pp.85-109.
- 이유진(2025) “기후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조직과 위원회 개편방안”, 녹색전환연구소.
- 이재호 외(2017) “정보기술(I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정보화 조직 재설계”, 한국행정연구원.
- 이창훈(2025) “해외출장 결과보고-영국 런던”, 한국환경연구원.
- 전윤식(2024) “우리 기업이 주목할 만한 2024년 글로벌 기술 트렌드 전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정은미 외(2023) “한국 주력산업의 구조 전환 방향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 조재한 외(2022) “대전환 시대 혁신경제전환을 위한 산업정책 및 부문별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조현진 외(2022) “ICT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 2, 327-341.
- 차성민(2012) “ICT정부조직 비교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6, 3, 187-208.
- 하태수(2021)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한국행정사학지』, 제53호, pp.1-30.
- 한국은행(2024) “금융안정 상황(2024.9월)”, 한국은행.
- 한창용 외(2024)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연구: 성장 회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Aghion, P., Cai, J., Dewatripont, M., Du, L., Harrison, A., & Legros, P.(2015) “Industrial policy and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7(4), pp.1-32.
- Bravo-Biosca, A.(2016) “Firm growth dynamics across countries: Evidence from a new database”, FORA-NESTA.
- Burck et al.(2025)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Results”, Germanwatch.
- Crippa M. et al.(2024) “GHG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JRC/IEA 2024 Report』, JRC138862,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Limberg, J., Steinebach, Y. & Nystrup, J.(2024) “Dedicated climate ministries help to reduce carbon emissions”, 『npj Clim. Action』 3, 70.
- OECD(2023)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ies: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current contest”.

OECD(2022) “An industrial policy framework for OECD countries: Old debates, new perspectives”.

OECD(2021) “SME and entrepreneurship policy frameworks across OECD countries”.

Rolland, V. W., & Roness, P. G.(2011) “Mapping organizational change in the state: Challenges and classif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4(6), pp.399-409.

Schmidt et al.(2024) “2035 National Climate Plan Benchmarks for Major Economies”,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World Bank(2022)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

통계청 (검색일: 2025.3.6.),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온실가스배출량,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88>.

Climate Action Tracker (접속일: 2025.4.23.), South Korea,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검색일: 2025.3.24.), <https://ccpi.org/>.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검색일:2025.3.20.), World Energy Balances,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data-product/world-energy-balances>.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검색일: 2025.4.23.),  
<https://www.nrdc.org/bio/jake-schmidt/2035-national-climate-plan-benchmarks-major-economies>.

OECD data (검색일: 2025.04.24.) Primary Energy Supply 2020,  
<https://www.oecd.org/en/data.html>.

OECD data (검색일: 2025.04.24.) Renewable Energy 2020,  
<https://www.oecd.org/en/data.html>.

World Bank (검색일: 2025.4.4.) GDP per capita (current US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

World Energy Council (검색일: 2025.3.25.) Energy Trilemma Index Country Report,  
<https://trilemma.worldenergy.org/>.

“[깜깜이 전력 수급 계획] 환경-산업부, 전력수요 예측 ‘단판’ 같은 자료로 ‘원전 12기 용량’ 차이”,  
경향신문, 2015.8.19.)

- “기후변화 대응 두고 환경부산업부 부처간 불협화음 심화”, 전기신문, 2025.1.17.
- “기후악당 대한민국”, 오마이뉴스, 2025.1.9.
- “[IT산업 20년 전]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5년’을 되돌아보다”, IT 데일리, 2022.8.31.
- “[ET시선]방통위, ICT·행정전문가 상임위원 필요하다”, 전자신문, 2023.3.19.
- “산업부-중기부, 엇박자 논란에 인사교류 '첫발'...수출·중기정책도 교류 확대 필요”, 뉴스핌, 2024.02.13.
- “[‘저탄소 밀그림’ 무엇이 무엇인가] 산업부 “환경부와 정책목표 다르다”...부처 간 엇박자”, 경향신문, 2014.1.28.
-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1> 정부조직 개편”, 전자신문, 2010.5.14.
- “탄녹위 2기 뜨자마자 불붙는 ‘탄녹위 개조론’”, 세계일보, 2025.2.25.
- “파리기후협정 체결 이후 과제, 환경-산업-기재부 정책 마찰부터 풀어야”, 동아일보, 2015.12.15.
-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 2050 탄소중립: 탄녹위 2기의 도전과 과제”, 한화진, 2025.3.12.
- “[현장] 국회 기후경제포럼 토론회, “정부 조직개편과 예산편성 변화가 관건””, 비즈니스포스트, 2025.2.5.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http://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http://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